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623
----------	------

제출연월일: 2021. 8. .

제 출 자: 성동구청장

1. 제안이유

급변하게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해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여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라. 1인 가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1인 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 3)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 4) 건강 지원
- 5) 맞춤형 일자리 지원

6) 문화·여가 생활 지원

바.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별첨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1. 7. 15. ~ 2021. 8.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행정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 가구 정책”이란 1인 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 주택”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6. “공유 부엌”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공간 및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 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 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
3.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사업
4. 건강 지원사업
5.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7.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4. 그 밖에 1인 가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표창)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 추진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1인 가구 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운영비용 소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직원 채용(4명), 센터 운영비(보증금, 월세 등), 사업비 등 향후 5년간 운영비용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구분	인건비	170,000	175,100	180,353	185,763	191,335	902,551
	운영비	519,000	86,520	89,115	91,789	91,789	878,213
	사업비	55,000	60,000	70,000	80,000	80,000	345,000
	합계	744,000	321,620	339,468	357,552	363,124	2,125,764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구분	구비	744,000	321,620	339,468	357,552	363,124	2,125,764
	합계	744,000	321,620	339,468	357,552	363,124	2,125,764

5. 덧붙이는 의견
 - 1인 가구 지원센터 인건비는 2021년 인건비를 참고하여 추계하였으며, 구체적인 세출은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복지국 여성가족과 강혜진

< 관 계 법 규 >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2.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6. 가족의 양육·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8.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9.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10.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 ③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